

與 2차 추경 논의... '전국민' 정부 압박 속 플랜B도 만지작

“전국민에 줘야 재난지원금 취지 부합” ‘10~20% 고소득층 제외방안’ 고민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대상이 축소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

다. 지급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제한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도 맞다”라면서 “상임

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70% 지급안”을 거부하되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안이다. 송영길 대표 측은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20% 지급 제외안은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아동수당 논란 때도 90% 지급안이 나왔다가 행정비용 매몰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현실성이 없는 비유”이라며 “고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내수진작을 고려한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당정 간 줄다리기는 송 대표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액을 높이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캐시

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이 역시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캐시백 한도는 문제는 재난지원금보다 당정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간부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충리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정의당 등 비교섭 5당 부동산 전수조사

민주당 때와 같은 방식 野엔 정보제공 동의서 보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 15명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75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조사단장은 김태웅 권익위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직무를 회피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이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우선 조사하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금융 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조사할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의혹이 적발될 경우에는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가족과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돼 있다”며 “현재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보완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보고한 뒤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들쭉시는 ‘윤석열 X파일’

“별 것 없다” VS “버티기 힘들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것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들쭉시키고 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지난 19일 “X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SNS 글이 발화점이었다. 이후 X파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X파일을 보니 별 것 없다’는 주장과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 파괴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1일 X파일을 확인했다는 여러 정치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X파일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들에게 공유됐다. 간략한 제목 정리 수준의 A4용지 두 장 분량과 이 제목에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스무 장 분량의 버전이 각각 있다고 한다. X파일에는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 됐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청문 정국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들도 X파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대다수는 언론을 통해 다뤄진 내용이라고 한다. 파일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개인 신상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소문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파일을 봤는데, 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를 제복만 정리해놓은 수준”이라며 “X파일이란 이름 붙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X파일 의혹에 대해 무대응 기조를 밝혔다. /연합뉴스

“권력분산 개헌 필요... 여야 공론화 나서달라”

박병석의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

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안 실현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현상’을 두고는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정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더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문은 닫혀 있지만,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며 “공적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 임대료료</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가능</p> <p>(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토지 (분양 매매)</h3> <p>광주에서 20분(6M 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8660-9801</p>
--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